**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사례 분석 보고서**

1. **서론**  
   디지털 플랫폼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. 그러나 결국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,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국가 간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.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판결을 분석한다.
2. **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쟁점**
   1. **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– 국외 이전 제한**  
      -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전 시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.  
      - 국외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.
   2. **주요 쟁점**  
      - 정보주체의 동의 유효성: 단순한 약관 동의로 충분한가?  
      - 이전 국가의 보호 수준: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법적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, 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.  
      - 통제권 상실 문제: 국외 이전 후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임.
3. **사례 분석**
   1. **카카오페이 – 알리페이 연동 사건**
      1. **사건 개요**  
         - 기간: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간  
         - 규모: 약 4045만 명, 총 542억 건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에 이전됨.  
         - 문제점: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이루어졌고 고지도 불충분했음.
      2. **위반 내용**  
         -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위반: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필요함.  
         - 신용정보법 위반: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의 절차 생략  
         - 최소수집 원칙 위반: 애플 결제 관련 정보만 필요한데 전체 이용자 정보가 이전됨
      3. **행정처분 결과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기관** | **대상** | **처분 내용** |
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카카오페이 | 과징금 59억 6800만 원, 시정명령, 공표 명령 |
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애플 | 과징금 24억 500만 원, 과태료 220만 원 |
| 금융감독원 | 카카오페이 | 추가 과징금 약 150억 원 예정 |
| 총합 | 카카오페이 | 약 233억 원의 과징금 부담 예상 |

* + 1. **주요 쟁점**  
       - 알리페이의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넘긴 점  
       - 애플 기기 미사용자의 정보까지 포함된 점  
       - 알리페이의 중국 내 법적 구조로 인해 정보주체 통제권 상실 우려  
       - 카카오페이의 주장: “업무 위수탁”이라 동의 불필요 vs. 개보위 판단: “제3자 제공”으로 동의 필요

1. **관련 법률 조항 요약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법률 조항** | **내용** | **핵심 쟁점**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| 국외 이전 시 고지 및 동의 필요 | 동의의 명확성, 보호 수준 검토 |
| 제28조의9 | 국외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 | 계약 체결, 기술적 보호조치 |
| 제39조의12 | 과징금 및 시정명령 가능 |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|

1. **종합적인 의견 및 평가**  
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연동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간 법적 충돌을 수반하는 복합적 윤리 및 법적 문제다. 특히 중국과 같이 국가가 기업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제휴만으로도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.  
    카카오페이 사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휴를 추진할 때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. 알리페이와의 협업은 기술적으로는 편리했지만, 법적 및 윤리적 고려가 부족했다.  
    향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:  
   -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고지를 제공할 것  
   - 국외 수탁자의 법적 및 기술적 보호 수준을 사전 평가할 것  
   -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I 및 절차를 마련할 것
2. **결론**  
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이다. 카카오페이 사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휴를 추진할 때 반드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해야 함을 보여준다. 향후 관련 법률의 강화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.